

# 한빛원전 3·4호기 ‘흑역사’... 노후화된 지금부터가 위험

## 국감장서 밝혀진 한빛 3·4호기 ‘흑역사’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건설... 전씨 비자금 창구 의혹 당시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인허가 담당 현 원안위원장 설계변경 600건·하자발생 3000건... “총체적 부실” 지적 증기발생기 이물질·격납건물에 구멍... 각종 사고 잇따라



### “운영허가 보류하고 각종 의혹 전수조사해야”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광 한빛원전 3·4호기의 ‘흑역사’가 언급됐다. 1980년대 중후반 인허가 및 건설 과정에서 비리의혹과 부실공사 의혹부터 최근 수년 동안 발생했던 원전 핵심 설비인 증기발생기 이물질 유입, 원전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격납건물 구멍까지 한빛 3·4호기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상세히 다뤄졌다.

질에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효환 국감 자료에는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전 대통령 이들도 올랐다. 인허가 당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 담당 공무원이 현재 원안위를 이끄는 김용환 위원장이란 점과 그의 재임 기간 원안위의 규제 실패와 국민 신뢰 상실을 지적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원자력발전소를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 앞서 자료를 내고 “한빛 3·4호기는 인허가 과정, 건설 과정에서 비리의혹, 부실공사 의혹제기가 구체적으로 이뤄진 원전”이라며 “부실공사의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는다. 2000년 이후 수년간 반복적으로 한빛 3·4호기에서 고장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30년 전 처음 한빛 3·4호기 계약을 시작할 때부터 이 모든 (비리, 부실공사)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영광 주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한빛 3·4호기 고장, 사고 내용을 열거한 다음 잇따른 고장과 사고의 배경에 부실공사가 자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추 의원이 공개한 2000년 이후 한빛 3·4호기 고장 및 사고일지를 보면, 3호기 격납건물 그리스 누출(2000년), 4호기 제어봉 안내관 손상(2004년), 4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2009년), 3호기 원자로용기 상부 헤드 배기관 누설(2010년), 3호기 제어봉 안내관 손상(2012년), 4호기 원자로 격납

철관 부식(2017년), 4호기 원자로 증기발생기 내 망치 발견 등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한빛 4호기의 경우 돔 형태의 격납건물이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빈틈이 적지 않은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추 의원은 한빛 3·4호기의 인허가 및 건설 계약을 둘러싼 비리 의혹,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공사와 일련의 원전 고장, 사고와 일정부분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빛 3·4호기의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 측근인 박정기씨가 사장으로서 있던 한국수력원자력(당시 한전)이 주도해 지은 첫 원전으로, 5공 청문회(1988년)에서는 한빛 3·4호기가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창구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참가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 여부가 도마에 올랐고 운영허가가 나던 시기인 1994년에는 과학기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실공사가 핵심 쟁점이었다.

제 14대 국회 국감(1994년 10월)에서는 “한빛 3·4호기 설계변경 600건, 하자발생 3000건이 발생한 사실”과 “총체적 부실공사 상황이 끝내 해결되지 않고서 원전 운영이 시작됐다”는 지적(최라도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같은 국감에서는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인코넬 600 소재로 된 증기발생기가 내구성이 취약하다.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에 따른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데 왜 문제가 많은 재질로 된 증기발생기를 썼느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유 전 의원이 23년 전 지적한바와 같이, 한수원은 3000여억원을 들여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4대)를 조기 교체하기로 했다.

추혜선 의원은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빈틈),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 등 관련 사안 모두 부실공사, 부실계약에 따른 결과”라며 “설계수명(40년)의 절반을 넘어 노후원전이 되 가는 지금부터가 더 위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국회에 간 5·18 택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힌트페어 518 사진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영화 택시운전사에 등장한 택시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부영’ 성토장 된 국감장

광주선 임대아파트 임대료 ‘폭탄’·경기도 하자투성이 아파트 공급... 박근혜 정부 맨 주택기금 지원 ‘씩쓸이’

광주에서는 매년 임대 아파트 임대료 ‘폭탄 인상’, 경기도에서는 하자투성이 아파트 임대료 공분을 사고 있는 부영에 대한 성토가 국감장에서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부영과 부영계열사가 사실상 ‘씩쓸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부영이 공동주택 용지를 대거 매입해 임대료 폭리, 집장사를 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아파트도 물건 보고 골라서 살때다. 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건설사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6일 “경실련과 함께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10위 업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부영주택이 2008년 이후 주택도시기금을 사실상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7조8142억원이 60개 업체에 지원됐다. 1위는 3조8453억원(전체의 49.2%)을 지원받은 (부)부영주택, 2위도 부영계열사인 (부)동광주택으로 4062억원을 지원받았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일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전문 회사를 표방하는 부영이 2010년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가장 많이 매입한 점도 지적했다. 주택 임대보다 땅 장사에 집중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토지

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영은 민간 임대아파트 전문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분양 사업 용지를 많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이후 부영의 분양용 토지 매입액은 2조3598억원으로 임대주택용 토지 매입액(6737억원)의 3.5배에 달했다.

최인호 의원은 “부영이 주택도시기금과 같은 저리 융자 등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품질향상과 임대료 인하 노력을 하지 않고 ‘집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소방청 영남 출신 사조직 ‘낙동회’ 직원 사찰·인사 관여”

### 권은희 의원 진상규명 촉구

소방청 영남 출신 사조직 ‘낙동회’의 존재와 이 조직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진행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은 감찰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작성했다는 것과 부정적인 품문 위주의 내용으로 (작성된 점)을 비쳐볼 때 전형적인 사찰 문건”이라며

이에 소방청 측은 사실상 ‘사찰’을 시인하는 답변을 했다.

권 의원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진행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은 감찰 권한이 없는 부서에서 작성했다는 것과 부정적인 품문 위주의 내용으로 (작성된 점)을 비쳐볼 때 전형적인 사찰 문건”이라며

“이 문건이 낙동회 모임과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소방청 보고”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5년 국민안전처 시절 소방상황센터에 전입한 한 직원에 대한 사찰 기록이 나오는데, 이 문건이 발견된 폴더명은 ‘센터장’으로 돼 있다. 당시 센터장은 변수남

현 소방청 119구조부국장이다.

권 의원은 또 낙동회가 소방청 내부조직 인사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 인사 교류 행정은 전임을 희망하는 직원이 많은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있다”며 “TK와 PK가 호남지역에 비해 2배나 많은 전임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임비율에서 지역적 차별, 인사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농지은행 · 농지연금

똑똑한 농지관리 전문가 fb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fb



2030세대 농지지원 20~39세 창업·취업농에게 5~10년 장기임대, 장기저리(30년, 1~2%) 농지 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임대차·교환합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 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